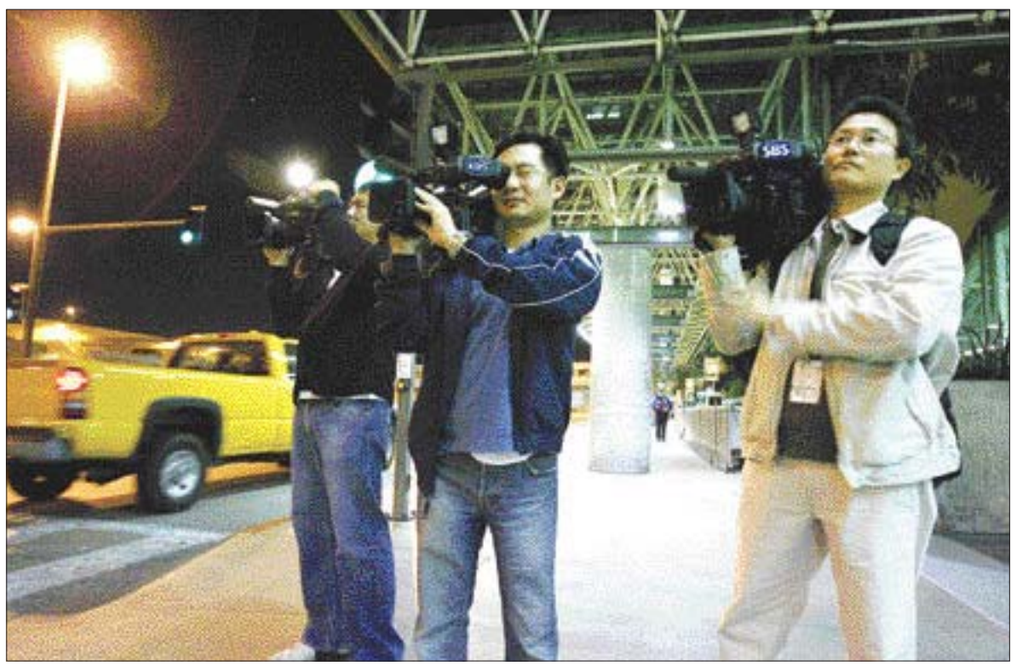

대선 정국에 주요 변수로 부각되고 있는 김경준 전 BBK 대표의 한국 송환 임박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13일 새벽 (현지시간) 미국 LA 국제공항에서 취재진들이 김씨의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하루만에 난관 봉착 신당-민주 합당

범여 대선 후보단일화 먹구름

신당 친노, 초·재선 '밀약설' 제기 반발

兩후보 의지 강해 곧 재협상 시작될 듯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원샷 통합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어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범여권의 단일대오 형성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특히 이번 통합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대선 승리를 위한 범여권의 자기희생적 결단이라는 취지는 퇴색되고 내년 총선을 의식한 밥그릇(지분) 싸움으로 비치면서 적전 분열이라는 비난이 거세질 전망이다.

13일 양당은 당초 4자 회동의 합당 합의에 따라 이날 후속 실무협상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신당 지도부가 내부의 거센 반발로 통합 조건에 대한 재협상 방침을 표명하고 민주당은 '재론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통합협상은 교착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일단 신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오충일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2시간 동안 격론을 벌인 끝에 민주당과의 통합조건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사회세력 출신의 김상희, 양길승 최고위원을 비롯한 대다수 최고위원이 "사전에 상의없이 합당에 합의하느냐"며 오 대표를 집중 비난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친노진영과 당내 중진그룹, 초·재선그룹 등이 제각기 회동을 갖고 민주당과의 '일대 일' 합당을 골자로 하는 통합 합의는 당내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이뤄진 것으로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친노진영의 김형주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들과도 충분한 논의없이 이뤄진 합당"이라며 "최고위가 만드는 협상기구를 통해 정당한 논의 절차를 거쳐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세력인 미래창조포럼은 성명을 통해 "정치적 지분 나누기로 보이는 합당과 단일화 논의는 즉각 백지화하고 전면 재협상하라"며 "필요시 '중대 결단'도 불사할 수 있다"고 말해, 탈당을 포함한 집단행동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공동선대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재협상 불가 입장을 확인하고 신당 지도부의 태도 변화를 강력히 비판했다.

박상천 대표는 이날 오후 지역 선대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재협상은 받아들이지 않겠으며 4인 합의문에 명시된 원칙에 대한 수정은 불가하다"는 입장과 함께 "협상이 깨질 때는 단독으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며 배수진을 쳤다.

한편, 민주신당은 이날 오충일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고 정세균 고문과 임종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희 최고위원, 이낙연 대변인을 위원으로 하는 통합협상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민주당은 박상천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고 최인기·이상열 의원, 김충조·신낙균 전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통합·단일화 협상위원회를 꾸렸다.

이런 가운데 신당 정동영 후보는 이날 신당 지도부의 통합조건 재협상 방침에 대해 "4자회담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피력했다고 정후보측 최재천 대변인이 전했다.

이처럼 양당이 통합조건의 재협상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보임에 따라 후속 실무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으나 양당 대선후보와 지도부가 조속히 통합작업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 조만간 협상 자체는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동영 후보 측 관계자는 "통합이 실패한다면 이는 적전 분열로 인한 대선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조만간 민주신당과 민주당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이라며 "절차상의 문제와 불평등한 조건이라는 점은 수긍하지만 범여권은 보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불순한 문제 발생시 국민저항 올 것"

한나라당 김경준 귀국 대응 비상 체제 돌입

한나라당은 13일 BBK 주가조작 사건의 주모자인 김경준씨가 조만간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당을 '비상 체제'로 전환하고 총력 대응에 들어갔다.

BBK와 이명박 대선후보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검찰이 여론을 호도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검찰과 정부 부처, 정보기관, 범여권 정당 등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공작 정치'의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법률 전문가들로 하여금 검찰 수사 발표에서 예상되는 경우의 수를 분석해 법률적 대응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도록 했다.

이방호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제사기꾼 김경준이 돌아오는 게 초읽기에 들어간 걸로 안다"면서 "오늘부터 당대표를 중심으로 원내대표, 선대본부장 등 관계된 필요한 분들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응하는 비상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1차적으로 모든 법률적 대응은 완전히 준비돼 있다"며 "문제는 김경준 사기꾼의 말 한마디와 서류 하나를 갖고 만의 하나 검찰이 브리핑이란 이름을 통해 국민을 호도함으로써 대선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도를 했을 경우 모든 것을 다해 총력 대응하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02년 대선 당시 김대업씨가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장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이 한달여간 중간수사 결과를 수시 발표하면서 의혹을 부풀린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김경준 사기꾼의 말 한 마디 한 마디, 위조문서 한 장 한 장을 검찰이 국민에게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현혹시키면서 대선을 흔드는 기도가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불순한 문제가 생기면 여러 방법으로 저지하고, 만의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전국적 '민란 수준'의 국민 저항이 올 것이라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허위폭로와 흑색선전, 제2의 김대업식 공작정치에 속지 말고 국민 여러분이 막아주도록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심재철 원내 수석부대표는 전날 한 일간지가 이 후보 소유 회사였던 LKe뱅크에서 다스의 BBK 출자금을 사용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민사소송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언론이 중간에 나서서 동원되지 않도록 언론인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李-김경준 '딜' 끝났다 제보 입수"

신당 김종률 의원 주장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 의원은 13일 귀국을 앞두고 있는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사진〉씨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사이에 딜(deal·거래)이 끝났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에리카 김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했던 김동현이라는 사람이 한나라당측하고 소위 '딜이 끝났다', '김경준하고 얘기가 다 마무리됐다'는 이런 제보도 있고 해서 진실규명에 중대한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의 진실을 확인해보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미 지난 2001년 3월 김경준이 금감원 조사를 받을 때 자기가 혼자 다 책임질테니까 미국 도피 등 향후 자신의 문제를 돌봐달라는 식의 커넥션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며 "최근 국내 검찰수사와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김경준씨 측근이 여러 접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2차로 어떤 딜이 있는 게 아니냐는 제보가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와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후보가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과 관련, "대선후보 등록 전에 기소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사실관계나 증거관계가 충분히 확보돼 있기 때문에 기소단계까지 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 당헌당규를 보면 기소가 되면 당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권정지가 되면 대통령선거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한나라당도 지금 후보 본인의 대선후보 등록 무효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단계인 만큼 후보교체를 논의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13일 "터무니없는 막가파식 신종 공작 정치"라고 일축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흑색 선전과 공작 정치도 부족해서 이제는 신종 공작정치까지 하고 있다"면서 "3년여 동안 한국에 오지 않겠다고 미국에서 송환 유예 재판중이던 김경준이 느닷없이 재판을 철회하고 국내 송환을 결정한 것부터 정치 공작이 스며들었다는 게 국민의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한국 송환 동행할 뜻 없다"

김경준씨 어머니·누나

한국 송환이 임박한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의 가족들은 김 씨의 한국 송환에 동행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김경준 씨의 어머니인 김영애 씨는 12일(현지시간) "아들이 언제 한국으로 송환되는 지 아는 바 없다"면서 한국에 함께 들어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가 한국에 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김경준 씨와 관련한 다른 질문에는 아무 것도 대답할 게 없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앞서 한국 입국설이 나돌던 김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 변호사도 "지금으로서는 한국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한국 언론에서 김경준 씨 가족들이 김 씨의 송환에 맞춰 한국으로 들어와 기자회견을 갖는 등 입장을 밝힌다고 보도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BBK 사건' 철저히 수사"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는 13일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BBK 사건에 대한 수사방침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사기밀 유출에 따른 이명박 후보의 명예훼손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의원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당사자 (명예훼손) 문제, 수사기밀 유출 문제가 교차하는 데 브리핑을 함에 있어서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률 외적인 사유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나갈 것이다. 의혹을 제기한 것만으로 매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